

아! 참혹한 5·18 광주 ... ‘오월의 노래’는 사실이었다

“트럭에 싣고 어딜갔지...” 계엄군, 여고생들 야산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 “두부처럼 잘리워진 너의 젖가슴...” 사망 여성 유방 등에 대검 상처 기록 3건

정부 공동조사단 공식 확인 ... 피해 여성들 지금도 정신과 치료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지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이 시위와 무관한 여고생들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사망한 여성의 유방과 성기에 자창(대검 등 날카로운 흉기로 생긴 상처)이 있다는 기록 3건도 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30일 광주일보가 확보한 정부공동조사단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파악한 5·18 당시 성폭행 피해 내용은 총 17건(중복 제외)이며, 피해는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80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광주시에서 다수 발생했다. 이 시기는 광주에 공수부대가 증파된 시점(19~21일)이라는 점에서 당시 계엄군들이 작정하고 무고한 광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자들은 10대에서 30대로 직업은 학생(여고·여대생), 주부, 생업종사자 등 다양했으며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

한 다수의 군인들에게 집단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지검 검시조서와 5·18 의료활동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여성의 유방과 성기 자창 관련한 기록과 함께 여성이 찢어진 옷을 입은 채 병원을 방문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성폭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무대 등에 연행·구금된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 등 실질적 성고문은 물론 임산부 등 일반 여성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부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당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상당수는 당시 여고생들이었다”며 “계엄군들이 시위 현장에 있는 여고생을 붙잡아 트럭에 싣고 인근 야산에서 집단 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성폭행 총격으로 2명의 여성이 아직까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가 하면 수치심을 못 이겨 분신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단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및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가 기관의 인정, 사과 표명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 폭력 트라우마 센터 건립과 함께 국가 폭력 피해자의 집단 기억을 국가 기록으로 공식화할 것을 제안했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 이와함께 공소시효 등과 관련, 가해자 처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정부 공동조사단의 5·18 성폭행 조사 결과에 대한 광주일보의 보도(10월 29일자 1·3면)는 정치권에 강력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이날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계엄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집단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 즉각적인 진상조사 위원 추천을 요구했다. 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5·18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진입한 계엄군이 여고생 등 무고한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사진은 1980년 5월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가톨릭센터 부근에서 장갑차를 앞세운 7공수 여단 병력이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협상 막판 진통

현대차, 수정협약서 문제 제기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지역노동계의 의견을 수용해 새로 수정한 협약서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31일 최종 성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당초 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30일 “현대차와의 협상이 31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밝혔다. 시는 30일 현대차와 협상을 마친 뒤 31일 오후 4시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운영위원회, 같은 날 오후 8시 최종 원탁회의 등을 개최해 수정 협약서를 추진하려고 했었다.

현대차와 수정협약서를 놓고 협상에 나선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수정 협약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현대차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대차의 의견을 31일까지 들어보고 이에 대해

지역노동계와 다시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 6월 1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뒤 광주시가 150여일간 아무런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인 현대차와 한국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 등 지역노동계 사이에서 또다른 중재안을 내놓아야 하는 광주시의 부담만 높아졌다.

시가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에서는 국비 지원 예산 배정 등을 위해서는 11월 초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흥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형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을 11월 초까지 결론낼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와 광주시는 현대차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 협약이 체결될 경우 자동차전용산단인 빛그린산단에 300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차 합작법인의 대주자인 광주시가 정부 부처와 손잡고 추진중인 광주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행복·임대주택 건설 ▲진입도로 개설 ▲노사 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공동 직장어린이집 마련 ▲개방형 체육관 신축 등 5개 분야로 압축된다. 총사업비는 2912억원에 90% 가량이 국비로 충당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법 “日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일본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면서 징용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상책임은 부인해온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 7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어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본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 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배상을 부정할 일본판결의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로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므로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반짝이는 사람과 빛나는 기업이 모이는 광주

무한가능성을 열어가는 도시,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최적의 투자환경에서 최상의 투자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01 차별화된 투자인센티브 지원
- 02 최첨단 도시형 산업단지 제공
- 03 에너지, 자동차 등 주력산업 집중 육성
- 04 편리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 05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지원

광주광역시 투자통상과 062) 613-4061~4